



주간통일정세 2011-09(2011.02.21~02.2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0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주민 저항·소요 빈발…前보안서장 피살(2/23, 자유아시아방송(RFA); 데일리NK)

- 이달 초 함경북도 청진에서 전직 보안서장 피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RFA가 보도
- 방송은 청진시 주민의 말을 인용, 이달 초 어두운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청진시 수남구역의 전 보안서장이 여러 괴한이 던진 돌에 맞아 숨졌으며, 이는 악명 높았던 전직 보안서장에 대한 복수극으로 추정된다고 전함.
- 주민 신고를 받고 피살사건 조사에 착수한 청진시 보안서는 교화소 출소자들을 사건 배후로 보고 내사를 진행 중이며, 보안서 직원들은 같은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분위기라고 이 주민은 전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16일)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 즈음에도 평안북도 정주, 용천, 선천 등에서 주민 수십명이 전기와 쌀을 달라고 외치며 동시다발적으로 소동을 벌여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모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올해 초 함경북도 연사군에서도 극심한 생활난에 시달리던 주민이 쌀감을 모두 회수한 산림감독대의 감독원 3명을 살해했고,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지구사령부로 출근하던 군관이 자전거를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짐.
- 북한 당국은 최근 국경지역에 대한 주민 감시체계 강화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5호 담당제'를 '3호 담당제'로 바꾸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보도

● 北, 내부단속 강화…중동 민주화 바람 차단(2/24, 연합뉴스)

- 튀니지에서 시작해 이집트, 리비아까지 이어진 중동발 민주화 바람 차단을 위해 북한이 본격적인 내부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짐.
- 북한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외부정보 유입의 차단을 강화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며 “고위층 등의 출국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고 전함.

● 軍 동원 폭동진압태세…北당국 초긴장?(2/24, 데일리NK; 자유북한방송(RFA))

- 데일리NK는 ‘함경북도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장군님(김정일) 친필지시에 따라 각 지역 인민보안국마다 100여명 규모의 ‘폭동진압



특수기동대'를 조직해 폭동요소 색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동대는 장마당과 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을 집중 순찰하고 검문도 벌이고 있다"고 밝힘.

- 앞서 이 매체는 작년 5월에도 북한이 반체제 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민보안부 산하에 '특별기동대'를 창설했다고 전함.
- FRA는 작년 12월 양강도 지역에 탱크부대가 배치되고 있다며 "탱크부대는 폭동 발발시 인민보안서 타격대와 함께 진압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배치된 것 같다"는 현지 주민의 말을 전하기도 함.

● **중동소식 확산에 北 전화-휴대폰 차단(2/25, 자유아시아방송(RFA); 연합뉴스; 열린북한방송)**

-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집트와 리비아 등지의 민주화 소식이 속속 전해져 당국이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차단하고 감시를 강화했다고 RFA이 보도
- RFA는 양강도 혜산시의 대학생을 인용해 "아프리카와 중동의 나라에서 연쇄적인 주민폭동이 일어나 정권이 뒤집히고 있다는 소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함경북도 회령시의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휴대전화를 차단한 것은 물론이고 간부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집 전화도 당분간 차단한다는 방침"이라며 "장사를 막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은 없지만 장마당(시장)에 보안원(경찰)과 경무관(헌병)이 짝 깔렸다"고 전함.
- 혜산시 대학생도 "각 대학마다 한 명씩이던 보위지도원을 4명으로 늘리고, 대학담당 보안원들도 새로 배치해 기숙사 등에서의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다"고 RFA에 증언함.
- 작년 탈북한 군 출신 주민이 양강도 주민과 통화해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실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양강도에서는 전화가 차단될 뿐 아니라 보안당국에서 TV 리모컨과 셋톱박스도 압수하고 있음.
- 열린북한방송은 양강도 혜산시 일부 지역에 24일 오전 이집트 민주화 시위 소식을 알리는 삐라(전단)가 다량 뿌려졌다고 전했는데 삐라에는 "국제적으로 독재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니 북한 주민들도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당국은 주동자를 색출하는 한편 삐라를 불태우고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비밀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 **北, 선군청년대회 개최...‘청년역할’ 강조(2/26,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26일 평양에서 '선군청년총동원대회'를 열고 강성대국 건설에서 청년의 역할을 강조
- 북한이 그동안 청년들을 동원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는 했지만 '선군청년총동원대회'라는 명칭의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
- 방송에 따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인민문화공전에



- 제15차 김정일화축전 폐막식, 2/21 양형섭(상임위 부위원장)·강능수(내각 부총리)·안동춘(문화상/폐막사) 등 참가하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관에서 진행(2/21, 중통·중방)
- 訪北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일행, 2/22 항공편 귀국(2/22, 평방)
- 北 문화성, 안동춘(문화상/기념보고)등 참가하 김정일 현지지도 40돌 기념 보고회 진행(2.24, 중방)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2/23 '모범지방공업군, 시, 구역 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정령 발표(2/25, 중방)

나. 경제

- **北남포항 결빙으로 45일간 물류 차질(2/21, 연합뉴스)**
 - 서해의 대기오염 등을 인공위성 등으로 모니터링하는 민간단체인 고려대기환경연구소가 배포한 남포 지역 인공위성 사진에 따르면 올해 겨울 한파로 평소 얼지 않던 북한의 남포항이 1월 초부터 결빙돼 45일간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정됨.
 - 사진은 1월6일부터 2월19일까지 북한의 대동강 하류는 물론 백령도 위의 황해도 장산곶에서 평안북도 청천강 하류인 안주군 해안까지 흰 얼음으로 덮여 있음을 보여줌.
- **北매체들 '세계적 식량위기' 거듭 보도(2/22, 조선중앙TV;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날로 심각해지는 식량 위기와 가격 폭등' 제목의 기사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를 인용, 국제시장에서 옥수수 가격이 전년보다 87.7% 폭등했고, 밀과 콩 값 역시 각각 83.2%, 58.1% 상승하는 등 세계식량 가격이 지난 1990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전함.
 - 앞서 조선중앙방송 등 주요 매체들도 지난 8일 "유럽동맹(EU) 성원국들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이 생활난을 겪고 있다"며 "유로를 사용하는 동맹 성원국들에서 지난해 12월 도매가격이 그전 같은 달에 비해 5.3% 또 인상됐다"고 보도한 바 있음.
- **北폭력조직이 부동산 중개업 독점(2/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경제난으로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을 폭력조직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RFA가 전함.
 - 방송은 "북한에서 부동산 거래는 불법이다보니 폭력조직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독점하고 권력층과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은 고액의 수수료를 물기 싫어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주택거래를 했다가 중개업자의 신고를 받은 보안원에게 적발돼 노동단련대에서 실형을 살기도 한다고 소개
 - RFA는 "1980년대 말부터 지역 인민위원회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



치고 ‘입사증(주택을 배정받는 증서)’을 바꾸는 식으로 주택을 맞바꾸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아예 개인소유처럼 주택을 사고파는 현상이 노골화됐다 “고 밝힘.

● **美 민간기관 “北 식량재고 6월 중순 바닥”(2/24,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식량 재고가 오는 6월 중순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으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조선의 기독교 친구들(Christian Friends of Korea: CFK)을 포함한 5개 미국의 민간 구호 단체들이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밝힘.
- 5개 기관의 전문가 7명은 북한의 요청으로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의 병원, 보육원, 가정, 협동농장, 창고 등 45곳을 방문해 북한의 식량난 실태 조사를 수행함.
- 이들 기관은 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은 끼니를 때우기 위해 잡초를 구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 어린이들이 성장 저해, 소모성 질환, 기아에 따른 무기력증뿐만 아니라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여름 폭우와 홍수로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채소 수확량이 50% 이상 감소했고 봄에 수확하는 밀이 겨울의 혹한으로 50%가 얼었다고 설명
- 북한의 지난해 농업 생산량은 512만 톤으로 2천400만 인구가 먹는데 필요한 793만 톤에 훨씬 못 미치고 국제 곡물 가격 급등으로 북한이 해외 구매 식량을 20만 톤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이들 기관은 전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배급량이 상당히 줄어든 공공 배급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저체중아 증가, 여성의 모유 수유 능력 감소, 환자들의 회복기간 증가 등 심각한 영양실조의 증거들을 발견했다고 밝힘.

■ 기타 (대내 경제)

- 황해남도, 석회석 매장량이 풍부한 신원군에 세멘트공장 건립 예정 (2/21, 중방)
- 남포-평양 사이 海水수송관 건설공사 착공식, 2/22 박병종(평양시 인민췌 1부위원장/착공사) 등 참가下 현지 진행(2/22, 중통·중방)

다. 군사

● **北군부, 美에 ‘이대로 가면 핵참화’ 경고(2/21, 연합뉴스)**

-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하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앞으로 편지를 보내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핵참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함.



● 탈북인민군 “입대 2년만에 42kg→31kg”(2/21, 연합뉴스)

-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주최로 열린 ‘북한 인민군 병영생활과 인권’ 세미나에 참석한 북한 인민군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군의 인권유린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민군 5군단 탱크부대에 근무했던 백화성씨는 “키 155cm에 42kg의 몸으로 입대했는데 2년만에 몸무게가 31kg으로 줄었다”며 “머리카락은 노랗게 변해 거의 다 빠졌고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앙상했다”고 당시의 영양상태를 설명
- 박명호 전 인민군 대위는 “지급되는 것은 쌀뿐인데 자체적으로 사택, 막사 등을 지으라고 하다보니 쌀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며 “굶주린 군인이 주민들의 식량을 훔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군대 없는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전함.
- 북한 공군사령부에서 지도원으로 근무한 최희경(여)씨는 “여성 군인에 대한 성희롱이 심각해 신체 접촉도 참고 넘겨야 했고, 성폭행으로 임신해 복대를 두르고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영양실조로 생리가 끊기는 경우도 허다했고, 생리대는 1년에 겨우 한번 지급될 정도로 공급이 열악했다”고 증언

● 북한군 식량 절반도 못줘…그나마 옥수수(2/23, 좋은벗들)

- ‘좋은벗들’은 북한 군인들에게 하루 필요 식량의 절반도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쌀이 아닌 옥수수로 지급되고 있다고 전하며 “평양시를 비롯한 수도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3군단 산하 사단의 훈련소들은 하루에 옥수수 300g도 못줄 때가 있다”며 “황해북도 훈련소들에서는 영양실조자가 속출해 동계훈련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밝힘.
- “강원도 1군단 산하 사단에서는 한 끼에 150g 미만의 옥수수를 배급하고 있다”며 “가공도 안한 통옥수수를 주는데 한 중대의 사병간 강자료에는 보병 100명 중 허약자가 약 30%에 달했다”며 일반 정규군의 경우 하루 정량은 백미 700~800g인데 2000년대 들어 식량사정이 좋을 때는 1년에 4~5개월은 쌀이 나왔지만 이제는 껍질을 벗겨낸 옥수수쌀도 아닌 통옥수수가 지급된다고 주장
-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하면 병사들을 집에 보내 치료를 받게 하는데 이달 중순 강원도 이천군에서 복무하던 병사는 집에 가서 영양보충을 하다가 갑작스런 폭식으로 사망하기도 했다”며 “강원도 한 중대에서는 신병이 솜신발을 빵 5개와 바꿨다가 적발돼 모진 매질을 당했다”고 단체가 전함.

라. 사회·문화

● 北언론인들 ‘정권 나팔수역’ 충실 수행 다짐(2/21, 연합뉴스)

- 북한 언론인들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강조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21 교시’ 1주년을 맞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진군의 나팔수’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다짐

- 리혁성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앙방송의 서효국 인민기자 논설위원(논설원)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자 언론인…강성대국 건설 대전의 진군 나팔수’ 서한 발표 첫돌을 맞아 열린 좌담회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희천발전소 건설장 등 경제전선의 주요 전투장들에서 현지 보도와 방송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다”며 “제1나팔수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

● 北, 1월부터 외국인 휴대전화 대여 중단(2/21, 교도통신)

- 통신은 최근 북한을 다녀온 외국인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지난 1월부터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한 휴대전화 대여를 중단했다고 보도
- 일부 외국인 방문객들은 당초 북한 당국이 휴대전화 대여 서비스를 비공식적으로 중단한 것은, 작년 말 통신시스템 변화 때문이라는 말을 북한 관리들에게 들었다고 통신에 밝힘.
-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 방문객은 평양 공항 등에 도착하면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맡겨놓았다가 북한을 떠날 때 되돌려받게 돼 있으며, 대신 북한 당국은 2008년 말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콧이 북한 체신성과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휴대전화를 대여해옴.

● 北, 남포-평양간 해수수송관 건설(2/22,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이 남포시와 평양시를 연결하는 ‘해수 수송관을 건설한다고 보도하며 “수송관이 완공되면 수도 시민에게 질 좋은 먹는 물을 더욱 원만히 보장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함.
- 박병중 평양시 인민위원회 1부위원장은 이날 착공사에서 “평양시민의 음료수 소독용 바닷물을 남포로부터 평양으로 끌어오기 위한 수송관 공사 착공식을 진행하게 된다”며 “장군님(김정일)께서 소독용 소금이 긴장한 조건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어 소독할 데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말해 해수를 식수 소독에 사용할 것임을 밝힘.

● ‘스텔스 USB’ 北세관망 뚫고 널리 유포(2/23, 연합뉴스)

- NK지식인연대 김홍광 대표에 따르면 대학교수 등 지식인 출신 탈북자들이 스텔스 전폭기처럼 적(북한)의 ‘레이더망(세관망)’을 무사 통과하도록 제작된 ‘스텔스 USB’ 수백개를 지난 1년간 북한에 꾸준히 들여보내 주민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세관검색시 ‘데이터 제로’를 뜻하는 ‘0 byte’로 표시됐다가 설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콘텐츠가 활성화되도록 프로그램화한 USB(컴퓨터 보조기억장치)를 탈북한 IT 전문가들이 작년 2월 개발해 인편 등으로 북한에 밀반입시켰다”며 “재북 통신원들에 따르면 현



지 주민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힘.

- 북한 보안당국은 최근 컴퓨터의 보급 확산 속에 주민 사이에 CD, DVD 등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고 판단, 작년 1월30일부터 특별단속반(일명 ‘130 상무’)을 가동했으며, 최근에는 밀반입된 USB를 색출하느라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짐.

● **北, 평양 청춘거리에 ‘태권도 성지’ 건설(2/23, 조선중앙TV)**

- 북한이 오는 9월에 열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체육촌인 평양 청춘거리에 ‘태권도 성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TV가 보도
- 방송에 출연한 조선태권도위원회 엄정철 부위원장은 “태권도 성지 구역은 태권도 역사박물관, 태권도 훈련센터, 외국인 숙소 등 기본 건물과 국제태권도연맹 과학연구소, 체육인 식료공장, 야외훈련장 등 보조건물로 이뤄져 있다”며 “건설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기초굴착작업 등이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함.

● **北 평남 용강군서 새 고구려 벽화무덤 발굴(2/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고구려시대 벽화무덤을 발굴했다고 보도하며 고구려 벽화무덤이 용강군 옥도리에서 발굴됐으며,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의 벽화무덤으로 확인됐다고 전함.

● **北 송석환 문화성 부상 사망(2/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김일성훈장 수훈자이며 인민예술가인 송석환 문화성 부상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23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했지만 송 부상이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밝히지 않음.
- 1936년생으로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한 송 부상은 1987년 국립평양예술단장에 임명된 후 1996년부터는 문화성 부상으로 일했으며,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부위원장과 조선음악가동맹 위원장을 지냄.

● **북한 결핵발병률, ‘아사하라 이남 제외 세계 최고’(2/25, 연합뉴스)**

- 미국 스탠퍼드대 의대 역학센터 선임연구원으로 북한 결핵지원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자인 새런 페리 단장과 비정부기구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하이디 린튼 사무총장은 24일 워싱턴 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북한의 결핵 실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통계를 인용, 북한의 결핵발병률이 90년대 중반 대기근 이후 급격히 증가, 북한의 결핵환자 발병률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밝힘.
- 페리 단장은 94년 북한의 결핵환자가 인구 10만명당 38명이라고 북



한 보건성이 WHO에 보고했으나 90년대 후반에는 100명을 넘어섰으며 2006년 10만명당 178명, 2009년 10만명당 345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10만명당 370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2. 대외정세

● 중 외교상무부장 방북(2/21,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중국 장즈윈(張志軍) 외교상무부장은 양허우란(楊厚蘭) 한반도 및 북핵문제 전권대사를 동행하고 20일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과 회담을 갖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장과 박의춘 외무상을 차례로 접견
- 장 상무부부장의 이번 방북은 명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公安부장이 지난 13~15일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견한 직후 이뤄짐.
- 장 상무부부장은 공산당 서열로 볼 때 외교부내에서 가장 높은 공산당 외교부 당위원회 서기이며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은 오히려 이보다 한 급(級) 낮은 부서기임.
- 통신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장지군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전하고 “박의춘 외무상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해온 장지군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북한-러시아, 경제협력위 올해 재개 사실상 합의(2/22, 연합뉴스)

-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2007년 이후 중단된 양국 정부 간 경제협력위원회를 올해 안에 재개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러 지역개발부가 밝힘.
- 지역개발부는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러·북 정부 간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위원회(경제협력위) 북측 위원장 리용남 무역상과 러시아 측 위원장 빅토르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과의 회담이 끝난 뒤 낸 언론 발표문에서 “양측이 올해 안에 경제협력위 5차 회의를 개최하는 가능성에 합의했다”며 “양측은 러·북 지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경제협력위 5차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 발표문은 이어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인도적 구호물자 지원 문제와 남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3각 투자 협력 문제 등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 러·북 경제협력위는 2007년 3월 모스크바에서 제4차 회의가 개최된



- “리비아에 北근로자도 200명 체류”(2/24, 자유아시아방송(RFA))

 - 반정부 시위로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리비아에 북한 근로자도 20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고 RFA가 보도
 - RFA는 리비아에 북한의 건설노동자와 의료진 등 200여명이 있고, 이들이 외부와 접촉하지 않아 철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리비아와 우호관계를 고려해 당장 자국민 철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함.
 - 1980~90년대에 북한은 수많은 노동자를 리비아에 파견했으며, 2008년에도 건설 노동자를 보내려고 리비아와 수차례 접촉했다고 RFA는 보도함.

- 北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이례적 홍보(2/25, 조선중앙통신)

 - 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내보낸 자사 홈페이지 홍보 기사를 통해 “우리 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외국의 벗들을 위해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며 주소(<http://www.kcna.kp>)를 소개
 - 홈페이지가 ‘김정일동지 혁명활동’을 비롯해 정치, 경제, 문화, 자연, 국제소식, 출판보도, 사진, 동영상 등의 항목과 그에 따른 세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앞으로 홈페이지를 널리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 대부분 관영인 북한 매체들이 홈페이지 개설을 알리거나 이를 홍보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임.

- 북한, 日 독도영유권 주장 맹비난(2/26, 연합뉴스)

 - 일본인들이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행위를 비난하고 독도는 ‘양보할 수 없는 조선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밝힘.
 -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황명철 주임은 일본 시마네현이 지난 22일 개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비난하면서 “이런 행사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

- 北인권보고관, 대북지원·6자회담 재개 촉구(2/26, 미국의소리(VOA); 연합뉴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지역평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고 보도
 - VOA에 따르면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21일 유엔 인권이사회 (UNHRC) 제 16차 회기에 제출한 16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인 식량난과 영양실조,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정치적 조건 없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
 - 또한 다루스만 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식량난이 홍수와 곡물가격 상승, 비료와 농약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정될 때까지 분쟁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하에 둘도 없는 동족대결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수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키 리졸브’ 한미군사훈련 비난(2/24,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민주조선에 ‘대화와 평화를 파괴하는 북침전쟁책동’이란 제목으로 실린 개인필명의 글 전문을 게재, ‘남조선 호전광들이 2월28일부터 3월10일까지 외세와 야합해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 놓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
- 통신은 “미 항공모함을 비롯한 대규모 침략무력이 동원되는 이 합동군사연습에서는 그 누구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제거’와 관련한 훈련들도 감행된다고 한다”며 “이것은 대화와 평화에 대한 겨레의 지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호전광들이 도발적인 북침전쟁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
- 이어 “남조선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전쟁위험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남조선 호전광들은 무분별한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
- 또 미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인 스콧 밴 버스커크 중장이 최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기존의 항공모함 전단 운용 기술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려는 데 목적을 둔 위협천만한 망발”이라고 비난
- 통신은 “그러한 망발이 천안호 사건을 일으킨 미국과 남조선 괴뢰군 사이의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이 당장 벌어질 시점에 나온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조선반도에 또다시 조성될 초긴장 상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덧붙였다.

● 北군부, 남북관계개선에 최대노력(2/24, 중국지성(中國之聲))

- 북한 군부는 23일 평양에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하겠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중국의 중국지성(中國之聲)이 보도
- 북한 국방위원회 조사단은 이날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진상 공개서’라는 문건을 발표, 연평도 포격사건은 한국측이 먼저 포를 발사하고 군사도발을 진행함에 따라 북한측이 부득이 반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 北 “추가도발설은 모략…연평도는 南측 도발”(2/25, 조선중앙통신)

- 중앙통신은 이날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무엇을 노린 추가도발 타령인가’ 전문을 게재해 “최근 남조선에서 그 무슨 ‘북의 추가도발’설이라는 것이 요란히 나돌고 있지만 얼마전 북남군



사실무회담을 결렬시킨 남조선 집권세력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추가도발’에 대해 떠들어 대는 것은 스쳐지날 문제가 아니다”고 전함.

- 또한 “지난해 일어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도 남조선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야망이 빚어낸 엄중한 반공화국 도발사건”이라며 “남조선 보수패당이 모략적인 추가도발설을 내돌리는 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내외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대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
- 중앙통신은 “모략설을 내돌리며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것은 남조선 통치배들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문제는 현 보수집권세력의 등장 이후 남조선에서 도발이니 뭐니 하는 반공화국 모략설이 지금처럼 요란하게 나돈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라고 비난함.
- 이어 “사실상 남조선 집권세력은 말로는 ‘대화의 문이 열려져 있다’고 하면서도 미국과 함께 2월 말부터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려 함으로써 대화를 파탄시키고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저들의 호전적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덧붙임.

● 남하 北주민 31명 이르면 금주 송환(2/27, 연합뉴스)

-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 주민 31명에 대한 합신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까지 귀순 의사를 밝힌 주민이 없어 이르면 이번 주안에 31명 전원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北 “임진각 등 심리전 발원지 조준사격” 통보(2/27, 조선중앙통신)

- 북남장령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이 27일 남측에 “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조준격파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힘.
- “최근 전연일대에서 감행되는 괴뢰군부의 심리전 행위는 전면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통일과 민족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온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대한 전면역행이며 반민족적 역적행위”라는 통지문 내용을 전하며, “남조선 역적패당은 조성된 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보고 반공화국 심리모략 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국방부는 이날 오전 8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북측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음. 북한군의 이 같은 통보는 우리 군이 이달 초부터 6년 넘게 중단됐던 대북 물품 살포를 재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칠순 생일이었던 16일 탈북자단체들과 한나라당 의원



들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보낸 데 대한 대응으로 보임.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북경계 및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음.

- **北 키리졸브 앞두고 ‘전면전·서울불바다’ 위협(2/27,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판문점대표부가 27일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루 앞두고 전면전과 ‘서울 불바다전’을 언급하며 군사대응 방침을 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힘.
 - 중앙통신에 따르면 판문점대표부는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위임에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다”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우리의 핵 및 미사일 제거를 노리는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갈에는 우리 식의 핵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우리 식의 미사일 타격전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판문점대표부는 또 “합동군사연습이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노리고 체제붕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공개한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역적패당의 반민족적인 통치체제를 전면 붕괴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강조
 - 이어 “만약 침략자들이 ‘국지전’을 떠들며 도발해온다면 세계는 일찍이 알지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전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온갖 대결책동을 산산히 짓부셔버리는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
 - 성명은 열거한 세 가지에 1~3의 순서를 매겨 입장을 내놨으며 ‘위임에 따라’라는 표현을 사용해 국방위원회 등 군부 입장을 전달한 것임을 시사함.

■ 기타 (대남)

- 我 「인권추」의 ‘북한인권기구’ 설치 계획을 “남북관계 개선에 인위적 난관을 조성하는 모략소동”으로 비난 및 南北군사실무회담 결렬 책임 持續 전가와 “동족대결정책 중단” 촉구(2/18, 중통·민주조선)
- ‘南北 군사실무회담’ 결렬은 南당국의 “대화파탄책동의 필연적 산물”로 南側의 ‘국민정서’ 거론은 “대화를 방해, 회피하려는 양탈질”이라고 비난(2/21, 중통·노동신문·평방)
- 北 방송, 南 일부 야당과 방송의 ‘국정원 요원들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침입 사건진상’ 상세히 인용 보도(2/24, 중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北 UEP, 비핵화 논의에 포함돼야”(2/25)

- 미국 국무부는 24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는 북한 비핵화 논의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날 북한의 UEP 관련 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단지 한 순간, 단 한번의 절차를 통해 (북한 UEP 보고서 채택이)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된 것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협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음.
-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요구사항인 동시에 국제사회의 요구사항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UEP문제가 (비핵화) 논의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크롤리 차관보는 미국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는 물론 유엔 차원에서도 북한의 UEP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북한은 이웃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가 돼야 하며, 모든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거듭 촉구했음.

● 당국자 “北 UEP 안보리 대응 계속 추진”(2/24)

- 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안보리 대응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위 보고는 하나의 계기이고 여러 가지 다른 계기를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안보리 논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비록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적극적 공조를 통해 북한 UEP의 안보리 대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이 당국자는 그러나 다른 계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그는 또 안보리 이외의 대응카드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안보리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며 “제재위의 보고서 채택 논의도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안보리 본연의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안보리 의장 “北 UEP 보고서 계속 검토”(2/24)

- 유엔 안보리 의장은 23일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보고서 채택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달 순회 의장을 맡고 있는 호세 필리페 모라레스 카브레엘 포르투갈 대사는 이날 대북 제재위 보고를 겸한 안보리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패널의 권고 사항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 카브라엘 의장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궁극적으로 합의에 토대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 외교관들은 중국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안보리, 北 UEP 보고서 채택 불발(2/24)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 안보리는 23일(현지시간) 2시간 여 동안 비공개 전체회의를 갖고 북한 우라늄 농축의 심각성과 추가적 대북 제재 필요성을 제기한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측의 반대로 공개 및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유엔 관계자들이 전했다.
-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우라늄농축에 사용되는 2천개의 원심분리기를 직접 보고 온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와의 대담 결과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달 27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
- 보고서는 북한이 헤커 박사에게 공개한 농축시설 외에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다수의 은밀한 시설을 수년 전부터 개발해 왔을 가능성과 북한이 경제적 이유로 이를 외국에 판매할 가능성 등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과 경수로 개발계획이 유엔 제재결의 위반임을 강조하고 있다.
-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등 서방진영은 헤커 박사가 직접 보고한 사실에 바탕한 보고서의 채택 및 공개는 대북 제재위 활동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이 같은 우라늄 농축 활동은 이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유엔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러나 중국 측은 우라늄 농축시설은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일 뿐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서, 북한 우라늄 농축 문제는 안보리가 아닌 6자 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유엔 관



계자가 전했음. 유엔 안팎에서는 중국의 반대에 대해 북한 우라늄 농축 문제의 유엔 안보리 논의를 막고, 이를 중국 주도의 6자회담 틀로 가져가기 위한 전략적 포석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유엔 관계자는 “중국이 대북 제재위 회의 및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에 강력히 반대할 것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면서 “다만 대북제재위 및 안보리 논의 과정을 통해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실태와 중국의 무리한 북한 감싸기에 대해 상당수 안보리 이사국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 발전”이라고 말했음.

● 北 핵·미사일 동향 수상? 오바마 특별브리핑 받아(2/23)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상황에 대해 별도의 정보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조지프 디트라니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NCPC) 소장 및 시드니 세일러 DNI 북한담당 부조정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음.
-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외부로 공개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동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돼 브리핑 배경이 주목됨. DNI는 오바마 대통령이 디트라니 소장 등으로부터 지난 9일 브리핑을 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최근 홈페이지에 이례적으로 공개했음.
-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저지가 주 임무인 디트라니 소장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보고한 것은 일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지적임. 북한 정보만을 담당하는 세일러 부조정관의 배석도 이를 방증함.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핵·미사일과 관련된 북한의 움직임이 긴박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음.
-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건설한 제2 미사일 발사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발사타워 공사를 끝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여러 개의 지하 갱도를 추가로 굴착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음.
- 백악관은 지난해 말 연평도 사건 이후 1주일에 1~2차례 톰 도널런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외교·안보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관련 회의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소식통은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 앞서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은 지난 10일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 북한이 김정일의 후계체제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다음달 1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의 도발주기 끊기’를 주제로 북한 관련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며, 오는 24일부터는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 **위성락 24~26일 방미..북핵 대책 협의(2/22)**

-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외교통상부가 22일 밝혔다.
- 위 본부장은 미 국무부 및 백악관 인사들과 만나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문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을 포함, 북핵 관련 한미공조 방안과 북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특히 오는 23일(현지시각)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북한 UEP 문제를 다루고,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도 23~24일 방한하는 만큼 위 본부장의 미국 방문은 그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미국 인사들은 몇 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위 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라면서 “미국 측 인사들과의 구체적인 면담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 **中 6자회담 차석대표 어제 평양 들어가(2/21)**

- 중국 6자회담 차석대표인 양허우란(楊厚蘭) 한반도 및 북핵문제 전권대사가 20일 평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21일 “장즈권(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어제 방북하면서 양 대사가 수행했다”며 “양국간에 북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방안이 긴밀히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 양 대사는 장 부부장과 함께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직을 맡아온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나 6자회담 재개방안과 북한 UEP(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측은 23일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비핵화와 관련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 소식통은 이어 “중국측이 23일 외교부장 방한때 북·중 협의 결과를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장즈권 상무부부장이 평양에 도착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만수대 의사당에서 회담을 했다고 보도했음. 한편 양 부장의 방한에는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나 양 대사 등 북핵 담당라인이 별도로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나. 미·북 관계

● “北군부, 美에 ‘이대로 가면 핵참화’ 경고”(2/21)

- 북한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하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 장관 앞으로 편지를 보내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핵참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21일 말했다.
- 이 당국자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해 북한 동향과 남북관계를 설명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국자는 또 “북한측은 ‘핵문제는 결국 우리와 미국의 문제이니 조·미가 만나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 당국자는 “두 차례나 도발했던 북한으로서는 이제 거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수순은 결국 대화로 나오든지, 아니면 도발을 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으며 북한은 그 갈림길에서 있다”고 지적하고 “도발에는 ▲천안함·연평도 유형 ▲미사일·핵실험 유형 ▲테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그는 “이런 갈림길에서 북한 군부는 천안함·연평도와 관련해 남측에 대해 ‘사과를 못하겠다’는 입장 속에서 남측을 우회해서 미국과 큰 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남측에 대해 6·15와 10·4 공동선언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북관계를 통해 대충 얻을 것은 얻고 미국과는 큰 틀에서 합의해 체제보장을 받고 핵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특히 “김영춘 부장이 조·미 군사회담을 제안했듯이 지금은 북한은 군부가 고도의 외교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2009년 8월 미국 여기자들을 빌 클린턴 전 미대통령이 구해올 때도 북한 군부가 뒤에서 다 한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 군부가 이젠 외무성을 믿을 수 없으며 우리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 아래 클린턴 전 대통령을 초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북한 군부는 2008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을 당한 이후 전면에서 정책결정에 나서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군부의 정책결정 영향력은 통전부나 외무성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최근에는 대외관계까지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남북관계와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에 있어 군부가 뒤에서 작동했다는 증거가 나온다”고 평가했다.
- 이 당국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김 위원장의 건강이 급격히 나아지거나 악화되지 않는 ‘그럭저럭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장남인 김정남도 아버지 건강에 대해 ‘그럭저럭하다’고 언급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당국자는 또 김정남의 근황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과는 계속 소



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기 부인도 북한에 보내고 있다”며 “신변의 위협을 북으로부터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김정은의 후계세습에 대해 “열심히 권력세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세습자로 돼 있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의 생일 등의 중요한 계기에 더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2인자로 등극하는 수순은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의례적인 절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다. 중·북 관계

● ‘김정일 건강누설’ 中학자 징역 14년(2/25)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 소식을 한국과 일본의 정보기관에 알려준 중국의 조선족 학자 김희덕(金熙德, 59)씨가 국가기밀 누설죄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25일 일본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음.
-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일본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던 김씨는 뇌혈관계 질환으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2009년 초 구속됐음. 구속 당시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이를 묻는 질문에 “보도를 봤지만 그런 일이 실제 발생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확인을 거부했음.
- 일본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일본전문가인 김씨는 사회과학원 연구원 재직 시절 서방 언론의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 주중대사 “中, 北에 남북대화 노력 촉구”(2/25)

- 류우익 주중 대사는 25일 최근 북·중 고위급 협의결과에 대해 “중국 측은 남북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류 대사는 이날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 측은 기존의 입장을 요약·반복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류 대사는 지난 20~22일 장즈진(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의 방북결과를 전하며 “중국 측은 북한 측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으며 북한은 거기에 대해 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 그는 이어 “이는 남북간에 평화적 해결을 위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요약해서 반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또 지난 1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난 명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의 방북결과에 대해서는 “남북회담을 잘해서



그것이 6자회담으로 가면 좋겠다는 요지였다”고 설명했다.

- 김정은 중국 방문설에 대해 류 대사는 “언론에서 추측보도가 있었으나 대사관으로서는 확인한 바 없다”며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 내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공표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 류 대사는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차례 방중한데 대해 “큰 틀에서 볼 때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고 중국과 외부세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며 “실제로 김정일 두 번째 방문 이후 북한의 지방관리들이 중국 도시들을 방문해 발전상을 시찰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 北김영남, 中외교부 상무부부장 만나(2/21)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방북 중인 장즈쥘(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했다.
- 중앙통신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장지군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 장 상무부부장의 이번 방북에는 중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양후란(楊厚蘭) 한반도 및 북핵문제 전권대사가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6자회담 재개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임.
- 장 상무부부장은 또 이날 박의춘 외무상을 만났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평양지하철 등을 참관하고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묘를 찾아 헌화했다. 그는 전날 평양에 도착해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했다.

● 北외무상, 中외교부 상무부부장 만나(2/21)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방북 중인 장즈쥘(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했다.
- 중앙통신은 “박의춘 외무상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해온 장지군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장 상무부부장은 전날 평양에 도착해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했다.

라. 일·북 관계

● 북한, 日 독도영유권 주장 맹비난(2/26)

- 북한은 25일 일본인들이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행위를 비난하고 독도는 ‘양보할 수 없는 조선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밝혔다.
-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황명철 주임은 일본 시마네현이 지



난 22일 개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비난하면서 “이런 행사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그는 또 “이것은 우리나라를 재침략하려는 일본의 야심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국, 미국이 北핵보유국 용인할까 우려” <전문가>(2/26)

- 한국은 미국이 행여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확산 방지 및 관리 쪽으로 정책목표를 옮길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분석했음.
-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북아시아 정책센터 소장은 24일 ‘미국의 확장억지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전 미 행정부가 북한과 양자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다루고 한국을 소외시키지 않을까 하는 분명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음. 오바마 행정부가 1990년대 중반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 당시의 대북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다는 것임.
- 부시 소장은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봄 북한의 미사일·핵 실험에 대해 한국과의 확고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대처하면서 이러한 우려들을 완화시켰다”고 말했음. 부시 소장은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머지 않아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며, 확산문제를 관리하는 데 주력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미국이 언명한 목표(비핵화 목표)가 진정한 목표이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음.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 동맹 공동비전’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력 공약 등 안보 분야가 강조된 것은 이러한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고 부시 소장은 설명했다.
-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 등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안보공약 이행을 확고히 하고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주한 美 대사에 도노번 내정”(2/25)

-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조 도노번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내정됐다고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이 보도했음. 25일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무부는 도노번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주한 미국 대사로 전



출하는 등 일부 동아시아 담당 외교관을 교체한다고 전했다.

- 외교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는 지난달 5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바로 밑에서 돕고 있는 도노번 수석 부차관보가 캐슬린 스티븐스 현 주한 미국 대사를 대신할 차기 주한 대사로 거명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작년 美쇠고기 수입 2009년의 2배로 급증(2/22)

-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12만5천t 이상으로 급증, 전년에 비해 무려 97%나 늘어나면서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 최대 수입량의 60%선을 넘어선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0년 육류 및 가축 무역’ 통계를 통해 지난해 한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량이 12만5천681t(2억7천710만파운드)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9년의 수출량 6만3천817t(1억4천69만파운드)보다 97%나 급증한 것으로, 한국은 멕시코, 캐나다, 일본에 이어 미국의 4대 쇠고기 수출 시장에 올랐다. 또 이 같은 수입규모는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수입이 중단되기 전에 미국산 쇠고기가 가장 많이 수입됐던 2003년(19만9천409t)의 63%에 달하는 것임.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됐다가 2006년부터 재개된 뒤 수입량은 2006년 582t, 2007년 3만5천343t, 2008년 6만8천989t, 2009년 6만3천817t 등 증가세를 보여왔음.
-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계속돼 왔음. 지난 2008년의 경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방침을 결정하면서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촛불시위’가 발생, 정국이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으며 이후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이 허용돼 왔음.
- ‘30개월 미만’이라는 조건하에서도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한 데 이어 작년 11월말부터 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 올해 들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미국이 30개월 월령제한 폐지를 지속 요구할지 주목됨.

나. 한·중 관계

● “中 리커창 부총리 연내 방한 적극검토”(2/25)

- 중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李克強) 부총리가 연내 한국 방문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25일 “한·중 고위급 인사교류 차원에서 상무위원 가운데 리커창 부총리의 방한을 초청해놓은 상태이며 중국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한·중 양국이 지난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 격상함에 따라 매년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1명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돼 있다”며 “이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한 차례씩 다녀갔기 때문에 그다음으로는 리 부총리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방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리 부총리는 중국 공산당 서열 7위이며 5세대 지도자 가운데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함께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멤버임. 그는 올해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총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중 ‘북핵 해법’ 점점없는 평행선>(2/23)

- 한-중 양국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핵 해법을 놓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다짐하는 가운데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음. 6자회담 재개 여건 조성과 북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문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점점없는 평행선을 그리면서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확인했다는 게 주된 평가임.
- 회담에서 북핵과 북한 문제는 예상외로 비중있게 다뤄졌음. 전체 회담(80분)의 전반부인 소인수 회담(40분)의 의제가 남북대화화 6자회담 재개, 북한 UEP였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임.
- 우선 6자회담 재개를 놓고 양측은 사전여건을 통한 6자회담 재개라는 공통분모를 재확인했으나 여건조성의 구체적 수순과 내용을 놓고는 상이한 시각을 드러냈음. 중국 측은 현재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화의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조속히 6자가 모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문했음.
- 특히 양제츠 외교부장은 언론에 공개되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밝히며 회담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음.
-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입장은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는 좀 더 조속한 시점에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이 선행된 이후 6자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지, 대화를 위한 대화가 돼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 북한 UEP 대응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차는 선명했음. 양측 모두 UEP에 대해 ‘우려’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국 측과 안보리 대응을 피하고 6자회담 틀 내에서 다루자는 중국 측의 입장은 팽팽한 대립각을 형성했음.
- 이런 가운데 중국 측은 이날 최근 장즈진(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의 방북결과를 전하며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을 우리 측에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가 잘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우리



측에 알려졌다”며 “북측의 반응은 정확하지 않으나 회담결렬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는 식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이번 회담은 북핵 해법을 둘러싼 차이점을 드러내기는 했으나 외교 장관 차원의 대화를 통해 양국 간 공통분모를 넓히고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려고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없지 않다고 정부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 李대통령 “북핵문제 진전에 中역할 당부”(2/23)

-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 부장을 접견하고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북핵 문제 진전 등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 대통령은 또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견실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이에 대해 양 부장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빨리 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 中 양제츠 “6자회담 조속 재개 노력”(2/23)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은 23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어 6자회담 재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양제츠 부장은 회담 모두에서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겠다”며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고 비핵화 목표, 관련국간 관계정상화를 실현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양 부장은 또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문제를 처리하는 출발점과 착안점은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있다”며 “중·한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 국민의 공통 이익에 부합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 그는 “2011년에 양국 관계는 더 좋은 상황을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한국은 1992년 수교 이후 16년 만인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민 방문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격상에 합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양국관계가 ‘구동존이(求同存異)’를 넘어서 ‘구동화이(求同化異)’의 정신을 함께 구현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 장관은 또 “국내 일각에서는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양국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나는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인식하에 양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고 있고 긴 안목에서 보면 양국관계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음.

- 그는 또 “지난 1월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고 정상회담이 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 양국 외교장관은 이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한반도 정세 관련 협력 강화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을 논의했음. 양국 외교장관은 특히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과 북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문제를 놓고 심도있게 의견을 조율했음. 이날 회담에는 류우익 주중대사와 장신썸(張鑫森) 주한 중국대사가 배석했음.

다. 한·일 관계

● 한·일 기독의원연맹, 日에 과거사규명 촉구(2/27)

- 한·일 기독의원연맹은 27일 3.1절을 맞아 일본 정부에 과거사 진상 규명과 전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조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음.
- 연맹의 공동 회장인 김영진(민주당), 도이 류이치(土肥隆一, 민주) 중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헌법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 시도를 포기하고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포함됐음.
- 이와 함께 연맹은 한국 국회조찬기도회(회장 황우여)와 함께 과거사 청산과 화해를 이뤄내는 데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음.

● 한·일, 강제동원 피해보상 ‘2+2’ 해법 추진(2/27)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사할린 잔류 한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자는 이른바 ‘2+2’ 해법이 양국에서 추진되고 있음. 이는 1965년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의 전범 기업과 정부 4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일제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양국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어 입법화 여부가 주목됨.
- 27일 양국 정치권과 법조계, 산업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양국 국회의원과 법조계 일부 인사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사할린 동포의 보상과 지원을 위해 양국 기업과 정부가 일정한 기금을 내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음.
-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위한 ‘2+2’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이 한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는 대일 청구권 수혜기업



- 이 전향적으로 ‘종자돈’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가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고 일본 전범기업과 정부가 동참해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 야당의원 16명이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을 제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 이 같은 구상은 지난 2000년 2차대전의 가해국인 독일 정부와 기업이 각각 25억 5천만 유로(3조8천억원)와 26억 유로(3조9천억원)를 출연해 설립한 ‘기억, 책임, 미래재단’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피해국 정부·기업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방식임.
 - 이에 대해 대표적인 대일 청구권 수혜기업인 포스코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방향을 정하면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게 회사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15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포스코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부에서도 관련 입법 움직임이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일 청구권 수혜기업은 청구권 자금 5억 달러중 1억1천948만 달러가 투입된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과 한국통신, 한국전력, 도로공사를 비롯해 주요 공사와 공기업, 민간기업들이 망라돼 있음.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가 먼저 나서는 것은 조심스럽고 민간 차원에서 나서서 피해자 보상과 지원 노력을 한다면 정부로서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음. 다만 일본 여당인 민주당의 한 의원 보좌관은 “한국 측 정부·기업이 참가하는 2+2 형태의 기금 설립 논의를 알고 있다”며 “다만 일본 내에서는 확실한 보상 근거인 강제동원 명부가 있는 중국인 강제징용자 문제를 우선 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게 사실”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일단 피해자들과 협상의 장을 마련하는데 동의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측 관련 동향에 민감하게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전후보상 문제 전문가인 경북대 법과대학 김창록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2 해법을 통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진다면 식민 지배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다”며 “2+2 해법에 대해 한·일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日 산케이 ‘한국 핵무장론 대두’ 민감 반응>(2/26)

- 일본의 핵무장 주장을 자주 소개해온 보수 성향의 일본 신문이 국내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핵무장 주장을 빌미로 일본 내 논의를 촉구했음. 산케이신문은 26일자 조간 서울발 기사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최근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음.
- 이 신문은 또 국내 여야 다른 의원들도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거나 남북한이 통일되면 즉시 해체한다’는 조건을 붙여 핵보유 검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하는 등 관련 동향을 상세하게 열거했음.
- 또 올 들어 국내 일부 신문에 비슷한 의견이 잇따라 실리고 있다고 전한 뒤 한국의 관련 논의가 ‘남북 공동 반일 핵개발론’에서 ‘한일 공동 반북 핵개발론’으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을 덧붙였음.
- “일본을 혼내주기 위한 ‘남북 공동 핵개발’론이 북한의 핵개발과 잇따른 군사적 도발로 후퇴했고, 지금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도 핵무장 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일한(한일) 공동 핵개발’론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임.
- 이 신문은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있었던 1970년대에도 핵개발을 계획한 적이 있다고 덧붙인 뒤 “6자회담 참가국 중에서 비(非)핵국은 한국과 일본 뿐”이라며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이 대두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일본 내 관련 논의를 유도했음.

● 韓·日의원, “기금으로 사할린한인 문제 해결”(2/25)

-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이 일본 도쿄에서 만나 양국 정부, 기업의 돈으로 기금을 설립해 사할린 한인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음. 양국 의원들은 25일 오후 2시께 도쿄 중의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할린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의원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음.
- 양국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양국 국회의원들은 사할린 잔류 한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계속하면서, 양국 기업의 협조를 받아 기금(재단) 설립을 포함한 최종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음. 양국 의원들은 이 결의문을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결의문 초안을 작성한 다카기 겐이치(高木健一)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사할린에 끌려간 한인의 노동의 대가인 우편저금 59만 계좌, 1억8천만엔(약 24억7천만원)를 돌려주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며 “사할린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돈을 종자돈으로, 일본 정부의 사과의 뜻을 담은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국회 인권포럼 소속



의원들은 사할린으로 징용된 한국인들 편에서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장기간 벌여온 일본인 변호사 다카기씨에게 국회인권상을 수여했음.

- 인권포럼 대표인 황 의원은 “개인재산을 털어가며 사할린 한인들을 도와온 다카기 변호사에게 상금이 없는 상을 주게 됐다”며 “국회인권상을 외국인에게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음. 도쿄대를 졸업한 다카기 변호사는 개업 첫해인 1973년 사할린 한인 소송을 맡은 것을 계기로 38년간 일본 법정에서 소송을 벌여왔음.
-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황 의원 외에 한나라당 이주영, 홍일표, 나성린, 강용석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선 민주당 도이 류이치(土肥隆一), 곤노 아즈마(今野東), 이시게(石母) 에이코 의원과 사민당 아베 도모코(阿部知子), 공산당 가사이 아키라(笠井亮) 의원 등이 참여했음. 또 이희팔 사할린귀환자 재일한인회장, 이팔봉 중·러이산가족회장 등 피해자들도 함께 했음.

● 주일대사 “조선왕실의궤 반환 시간문제”(2/24)

- 권철현 주일 대사는 24일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시간문제”라고 밝혔음. 권 대사는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일본 정치권에서도 일부 자민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선왕실의궤 반환에 찬성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일본 정기국회에서 3월 말까지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 다음으로 조선왕실의궤 반환 문제를 다루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예산안 통과 시기에 따라 도서 반환이 약간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올해 3~4월 발표될 일본 정부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는 “독도 영유권 기술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본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음.
- 권 대사는 이밖에도 ▲한일 문화교류 증진 ▲재일교포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사할린 한인 지원 ▲민간인 유골봉환 문제 해결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대사는 “올해를 새로운 한일 관계 100년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면서 “올해 예정돼 있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과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국민 방문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정부 “韓기업 남쿠릴 진출설 확인안돼”(2/22)

- 정부가 일본 측에 ‘한국 기업의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진출 계획은 확인된 바 없다’고 통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 아사히신문은 22일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6일 일한(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에게



‘(한국 기업의 진출설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21일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해왔다”고 보도했음. 신문은 또 “러시아 정부로부터 일본과 한국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고 덧붙였음.

-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진출설’에 대해 사실확인요청을 해왔고, 21일 ‘확인된 바 없다’는 수준의 통지를 했다”며 “이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수준의 내용이었다”고 말했음.

●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日민주당 의원 첫 참석”(2/22)

-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여는 이른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음. 이 통신에 따르면 이날 마쓰에(松江)시에서 열린 행사장에는 시민 등 약 500명이 참가했음.
-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13명이 참석했는데, 와타나베 슈(渡邊周.39) 중의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명도 포함됐음. 민주당 의원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에서는 모리 에이스케(森英介.62) 의원 등이 참석했지만, 외무성 등 중앙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음.
- 미조구치 전베(溝口善兵衛) 시마네현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중앙 정부에 독도 문제를 담당할 조직을 만들라는 요청서를 여야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교도통신은 또 한국인들이 매년 행사장 주변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지만, 올해는 눈에 띄는 활동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 시마네현은 일본 내각회의가 1905년 1월 28일 일방적인 독도 편입을 결정하자 그 직후인 같은 해 2월22일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시마네현 오키도사(隱岐島司) 소관으로 정한다’고 고시했다며 2006년부터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식을 열고 있음.
-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는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중국과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어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 1월14일은 ‘센카쿠 개척의 날’(오키나와현 이시가키), 2월7일은 ‘북방영토의 날’(중앙 정부)로 각각 정해놓고 있음.

● 日 관방 “韓 다케시마 불법점거” 언급 피해(2/22)

-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말해왔다”며 “(이를)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음.



-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시마네(島根)현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2월22일)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공식 견해를 밝혀왔지만, 에다노 관방장관은 이같은 언급을 피한 것임.
- 에다노 관방장관은 또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효한 방안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한·일, 올해 총어획할당량 6만t 합의(2/21)

- 한·일 양국은 내달 1일부터 상호 적용되는 올해 총어획할당량을 작년과 같은 6만t, 총입어척수는 작년보다 30척 줄어든 870척으로하기로 합의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21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도쿄에서 제13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상호 입어조건을 타결했음.
- 이어 양국은 당초 내달 1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GPS 항적기록보존 조업의 강제실시를 3년간 연기하고, 임검시점에서의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철회하기로 했음. 이같은 조치는 어업인의 조업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 또한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자원상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 지속적 이용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음. 양국 과학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고등어, 전갱이, 대게, 붉은 대게 등 양국 관심 어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해양생물자원 조사 및 평가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하게 됨.

라. 미·중 관계

● 中, 美대사 시위현장 출현에 논평안해(2/24)

- 중국 정부가 존 헨츠먼 주중 미국대사의 지난 20일 ‘시위성 집회’ 현장 출현에 대한 논평 요구에 함구했음. 중국의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0일 중국 활동가들이 시위성 집회를 개최한 베이징(北京) 중심가인 왕푸징(王府井)에 헨츠먼 대사가 있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구체적 상황은 모른다”고 답변을 피했음.
- 지난 23일 한 네티즌이 헨츠먼 대사가 당시 왕푸징 현장에 있었던 장면을 찍은 사진과 비디오를 공개했으며 이에 주중 미 대사관측은 “헨츠먼 대사가 가족과 톈안먼(天安門) 광장으로 가던 길에 왕푸징에 있었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라고 해명한 바 있음. 이날 정례브리핑장에서는 서방 기자들이 헨츠먼 대사의 행적과 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집중 제기됐음.



- 마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보고서 채택이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지적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 그는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고서 “중국은 각 측이 현재의 적극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6자회담을 재개시켜 그 틀 안에서 유관 문제 해결을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마. 미·일 관계

● 미·일, 28일부터 탄도미사일 대비 첫 특별훈련(2/24)

- 미국과 일본이 28일부터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지에서 탄도미사일 방어(BMD) 특별훈련을 처음으로 벌일 예정임.
- 24일 일본 해상마료감부(해군본부) 등에 따르면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28일 요코스카(横須賀) 기지에 일측 이지스함인 ‘조카이’와 미측 이지스함인 ‘샤일로(Shiloh)’ 등 8척을 정박시킨 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의훈련을 벌일 예정임.
- 양국이 미사일방어 목적의 개별 훈련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임. 미 해군이 작성한 시뮬레이션에 근거해 양국이 함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훈련을 할 방침임.
- 또 미 해군과 일 해상자위대는 24~28일 오키나와(沖縄)에서 양국 잠수함과 구축함 등 함정 8척과 항공기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對)잠수함 훈련을 벌일 계획임. 대잠 특별훈련은 1957년 이래 120번째임.

바. 중·일 관계

● 中·日,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28일 개최(2/24)

- 중국과 일본이 오는 28일 도쿄에서 외교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함. 중국의 마자오취(馬朝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를 높이고 정치적 신뢰를 높이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전략대화에는 중국 측에서 장즈전(張志軍) 외교부 상무 부부장, 일본 측에서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간 전략대화는 지난 2009년 6월에 열렸으며 이번에 20개월만에 개최된다. 양국은 지난해 다편(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 이후 정부간 고위급 접촉을 중단해 왔음.



- 일각에서는 3월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과 정상회담 전에 중일 양국이 전략대화를 통해 다오위다오 갈등을 포함한 외교·안보 갈등에 대한 봉합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 양국 외교차관급 회담에서는 이외에 일본의 ‘방위계획 신(新)대강’과 동중국해의 춘샤오(春曉, 일본명 시라카바<白樺>) 가스전 문제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됨.

사. 중·러 관계

● 中-러, 헤이샤즈 삼각주 공동개발 추진(2/24)

- 중국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을 벌였던 헤이룽장(黑龍江)성 헤이샤즈(黑瞎子) 삼각주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사가 24일 보도했음.
- 통신은 헤이룽장성 두자하오(杜家豪) 부성장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헤이샤즈 삼각주 공동 개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헤이샤즈를 무사증 통상구역으로 지정, 양국의 경제 및 관광 교류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양국은 이 섬에 관광 레저 시설과 상업 시설, 생태보호시설, 통상시설 등을 개발하기로 했음.
- 두 부성장은 “헤이룽장성은 러시아와 접경지역이 3천여km에 달하며 대러시아 무역액이 중국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며 “헤이샤즈를 무사증 통상구로 공동 개발, 러시아와의 교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과 러시아 동북의 헤이룽(黑龍)강(러시아 명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이 만나는 곳에 있는 헤이샤즈 삼각주는 327km² 규모로 모두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음. 옛 소련은 1929년 무력으로 헤이샤즈 삼각주를 점령,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으며 중국은 1964년부터 44년간의 끈질긴 협상 끝에 2008년 헤이샤즈 삼각주 분할에 합의해 절반 가량인 174km²를 되찾았음.